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89호
2016. 12. 12

정책동향

- 2017년 SOC 예산, 올해보다 6.6% 감소한 22.1조원
-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사례

시장동향

-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일부 지역 하락세로 전환

산업정보

- OECD,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제안
- 일본의 재해 대응 시스템 현황

건설논단

- 공공공사용 자재의 정부 직구매제도 개선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7년 SOC 예산, 올해보다 6.6% 감소한 22.1조원

- 정부안보다 0.4조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래 최저 수준 -

2017년 국가 예산 400.5조원

-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400.5조원을 통과시킴(<표 1> 참조).
 - 정부는 내년에 서민생활의 안정, 경제 활력 회복, 국민 안심 등의 국정 과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최종적으로 기존 정부(안)보다는 0.2조원 감소하였지만, 올해 본예산 386.4조원보다는 14.1조원(3.7%) 증가한 400.5조원을 통과시킴.
-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0.5조원), 문화·체육·관광(-0.2조원), 일반·지방행정(-0.6조원) 등은 정부안 대비 감소하였지만, 교육(+1.0조원), SOC(+0.4조원), 환경(+0.1) 등이 증가하였음.

<표 1>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C-B)	2016년 대비(C-A)	증가율
◇ 총 지출	386.4	400.7	400.5	-0.2	14.1	3.7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	129.5	-0.5	6.1	4.9
2. 교육	53.2	56.4	57.4	1.0	4.2	7.9
3. 문화·체육·관광	6.6	7.1	6.9	-0.2	0.3	4
4. 환경	6.9	6.9	6.9	0.1	0.1	0.8
5. R&D	19.1	19.4	19.5	0	0.4	1.9
6. 산업·중소·에너지	16.3	15.9	16	0.1	-0.2	-1.5
7. SOC	23.7	21.8	22.1	0.4	-1.6	-6.6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6	0.1	0.2	1.2
9. 국방	38.8	40.3	40.3	-	1.5	4
10. 외교·통일	4.7	4.6	4.6	0	-0.1	-2.4
11. 공공질서·안전	17.5	18	18.1	0.1	0.6	3.7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3.3	-0.6	3.8	6.4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12. 3일 보도자료

SOC 예산, 기존 정부안보다 0.4조원 증액된 22.1조원으로 확정

-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8.2% 감소해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되었는데, 국회 논의 후 정부안보다 0.4조원 증액된 22.1조원으로 확정됨.

-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복선 전철, 도시철도 등 철도 관련 건설 예산임(<표 2> 참조).

- 서해선 복선 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으로 확정됨.
- 이천~문경 철도 건설 예산은 2,876억원으로 15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도 2,211억원으로 650억원으로 증가함.
- 영천~신경주 복선 전철도 10억원이 늘어나 내년 1,0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진접선 복선 전철(1,030억원)도 63억원이 증액됨.
- 수원 및 인천발 KTX 예산도 각각 10억원씩 증액됨.

- 한편,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도로 유지·보수 및 일부 산단 진입도로 예산은 감소함.

-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영천~언양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산은 각각 정부안보다 200억원, 150억원, 60억원 증액됨.
- 그러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70억원 감액되었으며, 내포신도시 첨단 산단 진입도로와 세종 명학산단 진입도로도 각각 정부안보다 35억원, 20억원 감액됨.

<표 2> 주요 SOC 사업 예산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정부안	증감액	최종
증액	서해 복선 전철	5,183	650	5,833
	울산~포항 복선 전철	3,275	100	3,375
	이천~문경 철도 건설	2,726	150	2,876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61	650	2,211
	하남선 복선 전철	1,300	30	1,330
	영천~신경주 복선 전철	1,085	10	1,095
	진접선 복선 전철	967	63	1,030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75	655	730
	별내선 복선 전철	658	47	705
	대구선 복선 전철	590	110	700
	서울도시철도9호선(3단계)건설	334	130	464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	163	163
	인천발 KTX	37	10	47
	수원발 KTX	23	10	33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2,487	200	2,687
감액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993	150	2,143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538	60	598
	도로 유지·보수	5,245	70	5,175
	내포신도시 첨단 산단 진입도로	100	35	65
	세종 명학 산단 진입도로	80	20	60

자료 : 건설경제(2016. 12. 5).

정부안보다는 증액되었어도 9년래 최저 수준

- 비록 내년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어도 올해의 23.7조원보다는 6.6% 감액되었음. 금액 자체도 지난 2008년 20.5조원(추경 포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향후 건설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사례¹⁾

- 건설기업,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늘려 나가야 -

■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기업 증가 추세

- 지난 11월 말 현재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재편 중인 기업은 <표 1>과 같이 총 7개 업종에서 10개 기업으로 나타남.²⁾
 - 철강(3개사), 석유·화학(2개사) 및 조선·기자재(이하 각 1개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건설기자재 등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음.

<표 1> 「기업활력제고법」 승인 기업 현황

업종	승인기업	주력 제품	규모
석유화학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	대기업
석유화학	유니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	대기업
농기계	동양물산기업	트랙터, 콤바인 등	중견기업
철강	하이스틸	강관제품	중견기업
조선기자재	리진	케이블 트레이 등	중소기업
섬유	보광	스포츠 의류용 경량박지직물	중소기업
태양광셀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셀	중견기업
철강	현대제철	철강제품	대기업
철강	동국제강	철강제품	중견기업
건설기자재	우신에이펙	알루미늄 새시, 패널	중소기업

■ 주요 기업의 사업 재편 기대 효과와 지원 혜택

- 사업 재편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주력 제품의 수요 감소로 나타남.
 - 기업의 유희 설비 매각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과정에서 법인세 이연 및 정부 R&D 등을 지원받기 위해 기업활력 지원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업에게 지원된 주요 혜택으로는 법인세 이연, R&D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임(<표 2> 참조).

1) 본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기업활력제고법」은 과잉 공급 분야에 속한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 중임.

<표 2> 사업 재편의 기대 효과와 지원 혜택

승인 기업	재편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지원 사항
하이스틸 (강관제품)	· 과잉 공급 및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수요 잠식	· 생산라인 매각 후 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로 기술 개발	· 설비 매각·생산량 조정 후 고부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 R&D 우대 지원 ·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지원 · 월드클래스 300 우대 ³⁾ 지원
리진 (조선기자재)	·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 공급 심화 및 경영난 가중	· 유휴 설비 매각 후 발전기자재 생산 등 사업 혁신 추진	· 부채 상환 및 손실 사업 부문 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법인세 이연 ·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지원
보광 (의류용 경량 박지 직물)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 자회사인 에코프로텍스 합병 및 에코프로텍스 설비 매각 ·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신설	· 업종 전환, 생산 품목 특화로 기존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 법인세 이연 ·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지원 · 정부 R&D 우대 지원
우신에이펙 (건축 알루미늄 제품 생산)	· 건설 경기 악화 및 수요 감소로 건설자재 과잉 공급 발생 · 선박용 고효율 LED 조명 수요 증가	· 알루미늄 제품 생산설비 매각 · 선박 조명 LED 등 특수 조명 분야에 대한 생산설비 신규 투자	· 성장성 높은 분야로의 사업 재편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정부 R&D 우대 지원

■ 건설기업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방안

- 2017년 이후 국내 건설 수주의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기업은 부채의 축소 및 사업 역량의 집중화 등 지속적인 불황 극복 노력이 필요함.
 - 건설 수주 침체기를 대비하여 건설기업은 재무 역량 강화와 함께 수주 능력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활력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재무 역량 강화 : 건설 수주 침체기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축소가 필수적임.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 채무를 상환할 경우 법인세 이연이 가능함.
 - 건설회사가 재무 건전성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기업 활력 지원제도 활용 시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간 분납 가능함.
- 수주 능력 제고 : 건설기업간 합병 시 중복 자산에 대한 과세 이연이 가능함.
 - (지역 소재) 중소 건설기업간 합병은 지역 내 수주 능력의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기업활력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복 자산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합병에 의한 법인 설립 시 등록 면허세의 1/2이 감면 가능함.
- 건설기업이 사업의 혁신을 위해 R&D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3)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임. 기업은 선정 연도부터 총 10년 간 R&D, 해외 마케팅, 금융 우대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일부 지역 하락세로 전환

- 9월 30일 이후 상승률 둔화, 재건축 아파트는 11·3 대책 이후 하락세 -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

- <표 1>과 같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9월 30일 이후 둔화됨.
 - 수도권은 하반기 들어 11·3 대책 이전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1~0.31% 수준을 보였으나, 11·3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최근 하락세로 전환됨.
 - 지방 광역시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1·3 대책 이후 소폭 둔화됨.
 - 기타 지방은 -0.02~0.01%의 주간 변동률을 보였으며, 보합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표 1> 11·3 대책 전후 10주간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

날짜 지역	9. 30	10. 7	10. 14	10. 21	10. 28	11. 4	11. 11	11. 18	11. 25	12. 2	11·3 대책	
											이전	이후
전국	0.24	0.21	0.20	0.14	0.11	0.07	0.04	0.02	0.02	0.00	0.45	0.08
수도권	0.31	0.26	0.24	0.17	0.13	0.07	0.05	0.01	0.01	-0.01	0.53	0.07
서울	0.38	0.37	0.35	0.27	0.15	0.08	0.07	0.00	0.00	-0.02	0.78	0.05
강남4구	0.54	0.44	0.45	0.22	0.10	0.02	-0.01	-0.09	-0.08	-0.12	1.22	-0.29
인천	0.11	0.16	0.10	0.06	0.06	0.08	0.04	0.02	0.05	0.02	0.23	0.13
경기	0.26	0.14	0.13	0.07	0.11	0.06	0.04	0.02	0.01	0.02	0.31	0.09
1기 신도시	0.35	0.15	0.15	0.11	0.20	0.05	0.07	0.04	-0.01	0.02	0.47	0.12
지방 광역시	0.14	0.15	0.18	0.12	0.10	0.11	0.06	0.06	0.05	0.05	0.40	0.22
기타 지방	0.01	0.00	0.01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1	-0.03

주 : 1) 강남4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이며,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임.

2) 11·3 대책 이전은 2016. 10. 4 ~ 2016. 11. 3일이며, 11·3 대책 이후는 2016. 11. 4 ~ 2016. 12. 3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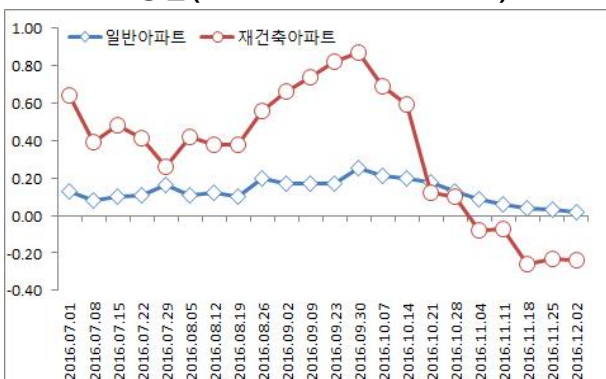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주).

- 11·3 대책 전후 한 달 간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은 11·3 대책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됨(11·3 대책 이전 0.45%, 11·3 대책 이후 0.08%).
 - 전국적으로 11·3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크게 둔화됨(수도권 0.53% → 0.07%, 지방 광역시 0.40% → 0.22%, 기타 지방 0.01% → -0.03%).
 - 특히, 서울(0.78% → 0.05%)은 강남4구(1.22% → -0.29%)를 중심으로 11·3 대책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됨.

■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로 전환, 일반 아파트는 상승률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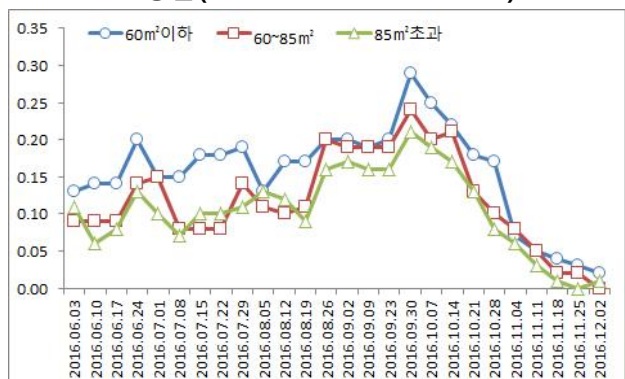
- 2016년 상반기 이후 수도권 유형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9월 3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 및 일반 아파트 모두 상승세가 둔화됨(<그림 1> 참조).
 - 재건축 아파트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를 보였으며, 11·3 대책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됨.
 - 일반 아파트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상승세 둔화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2016. 12. 2)는 0.02%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전국 규모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모든 규모에서 9월 30일 이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됨(<그림 2> 참조).
 -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모든 규모에서 9월 30일 이후 둔화된 가운데 지난 12월 2일을 기준으로 60㎡ 이하 0.02%, 60~85㎡ 보합, 85㎡ 초과는 0.01%를 보임.

<그림 1> 수도권 아파트 유형별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2016. 7. 1 ~ 2016. 12. 2)



주 :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부터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아파트임.
자료 : 부동산114(주).

<그림 2> 전국 아파트 규모별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2016. 7. 1 ~ 2016. 12. 2)



주 : 전용면적 기준임.
자료 : 부동산114(주).

■ 연속적인 대책(8·26, 11·3)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급격히 둔화

-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이은 8·26 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 11·3 대책(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상승률의 확대세가 9월 30일을 기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됨.
 -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1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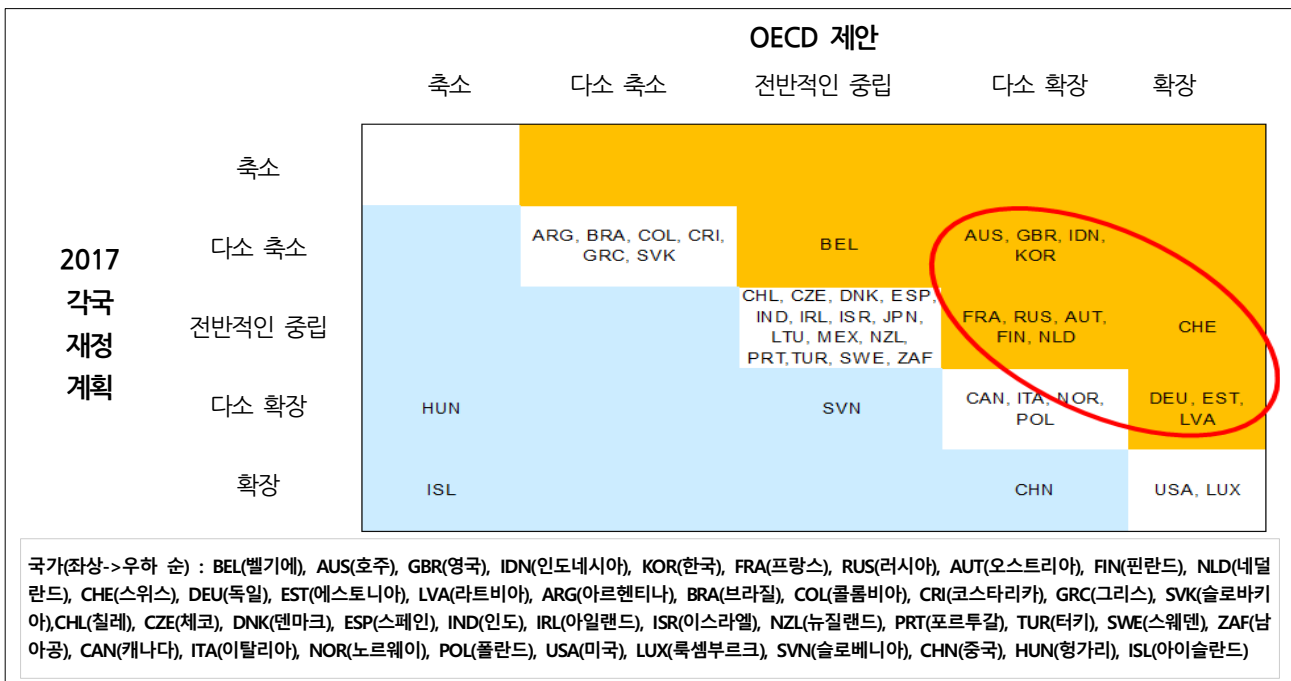
OECD,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제안¹⁾

- 저성장 탈출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전략 필요 -

OECD, 한국 포함한 OECD 주요국에 재정 지출 확대 권고

- OEC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세계 경제가 취약한 민간 투자와 교역, 불평등 확대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 통화 정책은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힘.
-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적인 부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의 훼손 없이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물론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함(<그림 1> 참조).

<그림 1> OECD 주요국의 재정 정책 방향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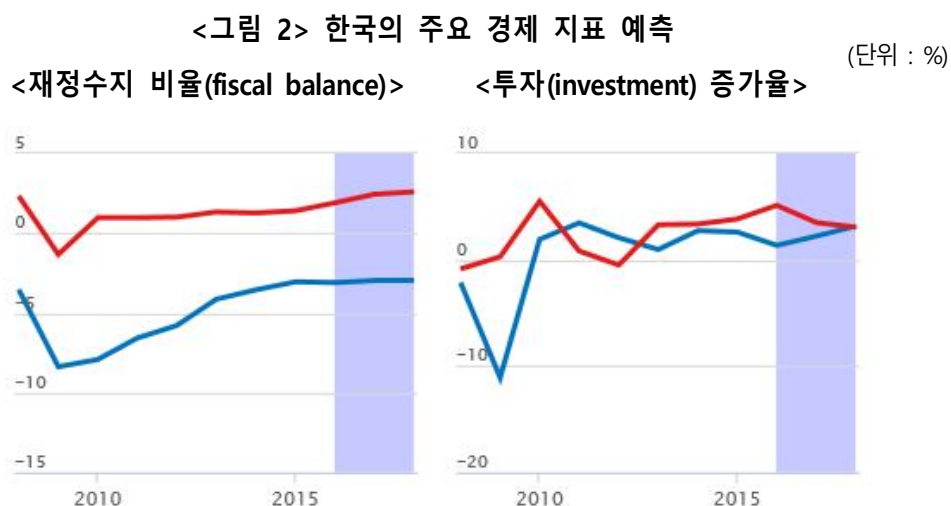
자료 : OECD(2016), "Escaping the Low-Growth Trap? Effective Fiscal Initiatives, Avoiding Trade Pitfalls", Economic Outlook, No.100.

1) 본고는 2016년 11월 28일 발표된 OECD(2016), "Escaping the Low-Growth Trap? Effective Fiscal Initiatives, Avoiding Trade Pitfalls", Economic Outlook, No. 100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 OECD 보고서는 현재 재정 지출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매년 꾸준히 더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
 - GDP 대비 0.5% 규모(한국은 약 8조원)를 추가로 지출할 경우, 당해 연도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4~0.6%, 중·장기적으로는 2%까지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함.
 - 재정 지출을 늘림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평균 3~4년 정도 상승하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될 것이라 밝힘. 구체적으로 한국은 1년, 미국은 4.5년, 영국은 6.5년 정도만 감내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회복된다고 제시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 중 하나로 인프라 투자(promoting infrastructure) 제시

- <그림 2>와 같이 한국의 재정수지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반면, 투자 증가는 2016년 이후 하락세로 전망됨.



주 : 적색은 한국이며, 청색은 OECD 평균임.

자료 : OECD(2016), "Escaping the Low-Growth Trap? Effective Fiscal Initiatives, Avoiding Trade Pitfalls", Economic Outlook, No.100.

- OECD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빈곤 계층의 소득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로 교육 증진(improving education)과 공공 투자(public investment), 연구·개발(R&D), 그리고 연금 개혁(pension reform) 등을 꼽고 있음.
 - OECD 보고서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빈곤 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일본의 재해 대응 시스템 현황¹⁾

- 난카이 해구 지진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연 재해 대응 시스템 -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의 재해 대응책 요구 높아져

-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의 재해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대내적 요구 사항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조기 복구 시스템 마련 및 자연재해 조기 측정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대외적 요구로는 2020 도쿄올림픽과 세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제 신용도 강화가 있음.
- 일본 지진 예측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 지진(Nankai trough earthquake)과 도쿄 내륙 지진(Tokyo inland earthquake)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함.
 - 두 지진 대응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본고에서는 난카이 해구 지진 대응 대책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함.
 - 난카이 해구 지진 대응책은 일본 국무조정실의 재해 기본 대응 방침과 국토교통성의 구체적인 재해 대응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의 난카이 해구 재해 기본 대응책

-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2013년 기존의 난카이 해구 지진 관련 대응책을 강화하는 「난카이 해구재해관리를 위한 특별법」²⁾을 제정함.
 - 「난카이해구재해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도쿄, 오사카, 교토를 비롯한 26개 지방행정지구와 70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
 - 또한, 3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교토 및 13개 지방행정지구와 139개 지방자치단체를 쓰나미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난카이해구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재해 대응 기본 방침인 ‘난카이 해구 재해 대응 기본 계획’³⁾을 수립함.

1) 본고는 제25회 한일건설경제 워크숍에서 Naoyuki Kuriyama가 발표한 ‘Disaster Countermeasures’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임.

2) 『Act on Special Measures for Promotion of Nankai Trough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3)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Nankai Trough Earthquake Disaster Countermeasures.

- 이 기본 계획은 사망자 수 80% 저감, 건물 피해 50% 저감과 같은 인적, 건물, 경제적 손실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및 시민들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토교통성(MILT⁴)의 구체적인 난카이 해구 재해 대응책

- 2014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구체적인 재해 대응 방안인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 대응 계획’을 발표함.
 - 국토교통성은 각 지역별 재해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 재해 비상조치 계획은 재해 발생 후 약 7~10일 간에 요구되는 긴급 조치 단계와 평상시에 긴급 조치 단계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함.
-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 대응 계획’은 크게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명 보호 단계(life-protecting stage): 재해 지역 피난 지원 및 철도·공항 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안전성 확보
 - 인명 구조 단계(life-saving stage): 긴급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공유
 - 인명 구조 및 긴급 지원 단계(life-saving/emergency aid stage):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한 접근 경로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
 - 재난 지역 지원 단계(supporting affected areas stage):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지원
 - 시설 복구 단계(facilities recovery stage):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의 사전 조치

■ 일본 재해 대응책이 주는 시사점

-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는 긴급한 대응을 요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함.
 - 일본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단계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재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도 일본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공공공사용 자재의 정부 직구매제도 개선해야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공급한 LH 아파트 28만 가구에서 약 7만 건의 하자 민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5개 하자 공종(工種) 중 4개(창호, 가구, 타일, 마루)가 전체 민원의 4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들 4개 공종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 공종이었다. 대다수 국민은 건설공사 하자는 건설업체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하자 있는 공사용 자재를 정부가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지급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시공상의 잘못이 없다면 건설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 자재업체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자재 품목을 조달청 등이 직접 구매해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6년 86개 품목에서 시작해 올해는 12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2009~2014년 연평균 공공공사 수주액이 약 47조원인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액은 약 15조원으로 그 비중이 33%나 된다.

공사용 자재를 정부가 직접 사서 공급해주는 것이 건설업체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높다. 품질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자의 원인이 부실 시공 때문인지 부실 자재 때문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다.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도 비일비재하다. 자재를 공급받는 발주기관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재업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 자

재업체의 납품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다. 과거의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업체에는 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자재업체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운영위원회와 조정협의회에 업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했으면 한다. 직접 구매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32개 품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축소하고, 71.5%나 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목표 비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 상징성 등이 요구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공사나 영세한 중소 업체의 수주 영역인 소규모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하자 발생, 안전성 저하 같은 문제를 수시로 일으키는 업체는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중소 자재업체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을까. 공공 조달 실적이 많은 중소 자재업체의 매출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제도로 중소 자재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제 선진국처럼 시장 진입 장벽의 제거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같은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